

# 행정안전부, 국민체감형 규제혁신으로 일상을 바꾸다

- 2024년 규제혁신 대표과제 5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 혁신 대표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연초에 수립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과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왔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토대로 규제혁신 추진여건과 기대효과, 관계기관과의 협업 노력 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

##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과제>

- ①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주소정보산업 지원) 입체공간 주소체계 구축으로 로봇배송,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소기반 혁신산업 육성
- ② (언제·어디서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110년만의 제도 개선
- ③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등 지역맞춤형 생활규제 특례 26건 발굴
- ④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예방접종비 지원 등 330개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 ⑤ (지방 덩어리규제 해결)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규제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규제혁신 추진

## ①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 실내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으로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가 되어 빈 주차공간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주차면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차정보를 연계한 주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내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 및 빈 주차면까지 안내받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생활 편의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인 주소정보산업 발전 촉진**

- 기존 2차원의 평면적인 주소정보 체계로는 미래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주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올해에는 드론·로봇 배송, 주차 내비게이션 등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기반 미래산업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해 4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 결과 >

과제명	지자체명
①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모델 개발	충남 보령
②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확산모델 실증	전남 무안
③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	인천 중구, 충북 청주
④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충북 음성

- 아울러, 고가, 지하, 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공간(총 968개)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5년에 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이러한 주소정보체계의 우수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아,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 등 주소체계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② 언제 ·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B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한결 손쉽게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대국민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효과 연간 71억 원**

-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 증명제도가 1914년 도입된 이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23년 기준) : 2,984만 통(부동산 매도용 134만(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난 5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제도 개선을 토대로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현재 시범운영(9~10월) 중에 있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여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③ 인구감소지역 생활규제 특례 확대

수도권에 사는 C씨는 고향으로 귀농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어 이주를 망설였다.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생겨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택을 빌릴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규제 중심의 특례 확대**

- 지방소멸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22.6.)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 특례를 부여해 운영해 왔다.
- 하지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부처와의 협업을 거쳐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를 발굴했다.

< 3대 분야 주요 특례 과제 >

분 야	주 요 과 제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li> <li>■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율·건폐율 완화 등</li> </ul>
생활인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li> <li>■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li> <li>■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로 관광인구 활성화 등</li> </ul>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 범위 확대</li> <li>■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li> <li>■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 대여 시 대학 및 회사 등에게 사용료 면제 등</li> </ul>

- 발굴된 특례를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개별법령 개정안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④ 민원인이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D씨는 출산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 24)으로 신청시 발급수수료(1천 원)를 내야 했지만, 행복출산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되면서 D씨는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 (행복출산서비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 통합 조회·신청

⇒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및 국민 편의 제고, 경제적 효과 연간 13억 원

-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민원 또는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직 있다.
- 행정안전부는 서류 발급과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 \* 구비서류 제로화: ('24년) 421개, (~'25년) 900개, (~'26년) 1,498개 모든 공공서비스
- 특히, 올해는 ①통신요금 가족결합 할인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30개(목표 달성률78%)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하였고, ②육아휴직 급여정보, 농지취득자격정보 등 신규 정보연계를 위해 고용부, 농식품부 등 10개 기관과 협의를 추진했다. 또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개정하여 기관별 업무처리 담당자가 공공서비스 접수·처리 시 좀 더 편리하게 시스템에서 다른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⑤ 규제책임관제 신설 등을 통한 덩어리규제 해결(대표사례 : 석탄 경석)**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던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지자체와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규제책임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석탄 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원도와 태백시, 행안부, 환경부가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다.

⇒ **관련 지자체 개발 및 산업발전 등 경제적 효과 총 3천 383억 원 기대**

- 각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수혜 범위와 효과가 크지만 대부분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과 연계되어 있어 지자체 주도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장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규제책임관을 도입하여 운영했다. 규제책임관은 지역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규제현장 점검, 지자체-부처 간 조정협의 참여, 지방 규제혁신위원회 안전 상징 등을 통해 석탄 경석 활용,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등과 같은 지역의 오래된 규제 해결을 촉진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혁신 대표과제’ 5건뿐만 아니라, 올해 계획된 과제들도 신속하게 완료하고, 내년도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현장의 의견 수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영석 (044-205-1481)
		담당자	서기관	신득모 (044-205-149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참고

##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과제(5건)

순번	과제명	과제 개요
1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소정보 확대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	<p><b>[기존]</b> 전통적인 주소정보 체계로는 지능형 인프라(빅데이터·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자율주행차·드론 등) 활용 등 미래 신산업 발전 지원에 한계</p> <p><b>[개선]</b> 주소정보(공간·사물주소, 실내이동경로 등) 확대 구축,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인프라 구축 및 상용화 지원</p> <p><b>[효과]</b> <b>민간의 자율성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인 주소정보산업 발전 촉진</b></p>
2	언제·어디서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p><b>[기존]</b>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p> <p><b>[개선]</b>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p> <p><b>[효과]</b> <b>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간, 비용 절감 등 국민편의 증진</b></p>
3	인구감소지역 생활규제 특례 확대	<p><b>[기존]</b>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제정(22.6월)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에 36개의 특례를 적용중이나 국민·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례 확대 필요성 지속 제기</p> <p><b>[개선]</b>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확대 도입</p> <p><b>[효과]</b> <b>국민·기업 체감형 규제특례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촉진</b></p>
4	민원인이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p><b>[기존]</b>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서류 발급·제출</p> <p><b>[개선]</b> 국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26년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시스템 연계로 관공서에 발급서류 제출 제로화</p> <p><b>[효과]</b> <b>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및 국민 편의 제고</b></p>
5	규제책임관제 신설 등을 통한 덩어리규제 해결	<p><b>[기존]</b> 지역별 테마형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p> <p><b>[개선]</b>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규제책임관을 지정하여 덩어리규제 과제 발굴, 현장점검, 기관협의 등 과정에 주도적 역할 수행</p> <p><b>[효과]</b> <b>주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 및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수용률 제고</b></p>